

‘식민지 근대화론’ 북한사 인식의 원류 비판

-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顔)를 중심으로 -

예대열(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최근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국현대사를 ‘재인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자는 정치논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기실 일본의 국가주의에 기댄 ‘식민지 근대화론’은 인식의 출발점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운운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¹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내용을 갖기 보다는 ‘반북 논리’에 기대 정통성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어떤 점에서 ‘반북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는가? 국내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자신의 논리를 일본의 학자 기무라 미쓰히코(이하 저자)에게서 차용하고 있다.²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식민지와 해방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이다. 요약하면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병합 이후, 북한의 광공업은 크게 발전했다. 특히 1940~1945년에 이루어진 군사 공업의 발전은 종래에 생각되었던 것 이상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했으며, 그 결과 북한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근대 공업 지대로 변모했다. 일제가 붕괴한 후, 생산 설비는 소련 점령군의 손을 거쳐 김일성 정권으로 넘어갔다. 김일성 정권은 이것을 기반으로 전쟁을 준비했고, 곧 남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이 점에서 일제의 전쟁 준비는 김일성의 전쟁 준비로 직결된 것이다.

¹ 정태헌, 「경제성장론 식민지상의 대두와 파탄의 논리」,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성찰』, 선인, 2007, 172쪽.

² 대표적으로 이영훈, 「‘인적 자본과 제도’ 남긴 식민지기 경제성장 - 해방 전후의 연속과 단절, 남한과 북한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고대신문』 148호, 2006.

즉 식민지 시기의 경제성장이 북한에서 전쟁 준비로 직결되었다는 논리이다. 일제시기의 경제성장과 북한의 남침준비를 결합시켜, '경제성장'과 '반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식민지와 해방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저자의 문제의식을 비판하기 위해, 그의 대표적인 저작과 논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³

2. 농업정책의 연속과 단절

저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북한정권은 왜 이렇게 전제적이고 포악한가. 또한 왜 그런 정권이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는가. 그 역사적·민족적·국제적 조건은 무엇인가"⁴하는 것이다. 그 '조건'을 저자는 과거 일제 전시체제기 일본군부가 추진한 국가통제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평가한다.

김일성 정권의 경제정책의 기본은 초기 이래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경제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데 있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반공적 국가주의에 공통된 전체주의사상에 입각하고, 역사적으로는 구 일본군부의 統制派와 革新官僚가 추진한 국가통제정책과 연속해 있다. 다시 말해 그 기원은 일본제국주의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유재산제도의 폐기와 농업집단화를 보인 점에서, 제국 말기에 행해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⁵

저자는 위와 같은 전제 아래 1946년의 토지개혁이 일제말기의 토지정책과 연속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농업제도의 변혁에 따른 농민의 세 부담, 높은 국가 징수율, 농민의 생산의욕 정체에 대해서 서술한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농촌의 권력구조에 주목하면 북한의 체제는 해방을 전후하여 명확한 단절을 보여주지만, 농업제도와 농업정책이라는 점에서는 현저한 유사성과 연속성이 발견된다고 평가한다. 농업부문으로부터 자원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광공업과 군사력을 확대·강화하고, 이를 위해 생산물과 노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해방 전후의 체제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주장이다. 그 예로써 ① 국가의 엄격한 생산물 징수 ② 토지의 사적권리 제한 ③ 증산과 세납을 촉진하기 위한 정신

³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혜안, 2001 ; 기무라 마쓰히코·아베 게이치,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미지북스 ;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 집산주의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발전」,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⁴ 기무라 미쓰히코, 앞의 책, 2001, 12쪽.

⁵ 기무라 미쓰히코, 앞의 책, 2001, 6쪽.

력 고무와 '대중운동'의 전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그러면 저자의 논의를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국가의 생산물 징수에 대해서 살펴보자. 저자는 식민지 시기의 일반적 소작료율(수확의 약 50%)과 비교하면, 토지개혁 후 하층의 구 소작농민에게 부과된 세금은 대체적으로 경감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작농과 중·상층 자소작농의 부담은 증가하였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물세 사정의 엄격함과 현물세를 제외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단보의 밭에 주작물로서 조나 보리를 재배하고 間作으로서 콩을 재배할 경우, 합계 파종면적은 2단보로 계산되었다고 한다. 평예(平刈: 평뜨기)는 수확을 전망하기 위해서 가장 표준적인 필지를 택하여 이삭 가운데 익은 곡식알갱이를 재야 하지만, 많은 경우 농사가 가장 잘 된 곳을 골라서 평가 했다는 것이다. 기타의 부담에 대해서도 총수확의 25%의 현물세는 법령상의 규정일 뿐, 애국미·성출 등 잡세로 인해 실제로는 일제시기의 일반적 소작료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를 갖고 실제 농민의 담세율을 분석한 김성보의 연구에 따르면, 농민 조세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현물세의 경우 평야지대에서는 30% 내외, 산간지대에서는 25% 내외가 준수되었으며 기타 잡세의 비중은 경미하였다. 예를 들어, 애국미의 경우 1949년 말까지 북한에서 징수한 애국미 총액은 1만 7,459석으로서 당시 농가총호수 121만 1천 295호로 나누면 1호당 0.014석, 즉 1홉 4작 정도의 소량이었던 것이다. 소련에 대한 '성출미(誠出米)' 부담 또한 1946년 3월의 토지개혁 직전까지만 실시되었으며, 그 후 그것은 농업현물세와 양곡수매사업으로 대체되었다. 양곡수매사업은 유상구매였으며, 그에 대한 참가여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실제, 1947년 1월 북한의 '양곡수매사업'은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보는 북한의 실제 현물세 징수율이 평균 50%를 상회하며 북한 농민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심한 중세(重稅)하에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⁷

두 번째로 토지의 사적 권리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자. 토지개혁이 실시되자 구 소작인은 토지개혁법령에 의해 분여지의 소유를 인정 받았다. 한편 자작농도 토지의 소유를 그대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저자의 지적처럼 이것이 북한 농촌에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토지개혁법령이 분여지의 매매·대차·저당을 금지하고(조항 10조), 토지처분권을 강력히 규제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을 들어 저자는 식민지 말기 전시체제의 사적 권리 제한과의 연속선상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가지고 식민지 시기의 사적 권리 제한을 무매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점은 당시 북한은 이러한 조치 속에서도

⁶ 기무라 미쓰히코, 앞의 책, 2001, 68쪽.

⁷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243~253쪽.

사적 소유권 보장과 그것이 갖는 창발성의 의미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 지도부는 국가관리 일변도가 지니는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민 경제계획'이 입안되기 시작하는 1946년 10월에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성명서'가 법령으로 발표 되었다. 즉, 해방직후 북한의 경제건설 방식은 전쟁 이후 급속하게 추진한 국유화 중심의 계획경제 방식으로 급전한 것과 달리, 소상공경제·자본주의적 경제형태를 조율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⁸

세 번째로 증산과 세납을 촉진하기 위한 정신력 고무와 대중운동의 전개에 대해 살펴 보자. 이 문제는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 원인을 살피는 문제와 맞물려서도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운동 방식은 이미 일제 전시체제기서부터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이다. 증산 실현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1940년 11월 종래의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의 大政翼贊會와 연대하는 國民總力聯盟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각 농촌에 조직된 부락연맹을 총괄하였고, 부락연맹은 1930년에 법인화된 각 부락의 殖産契에 기초를 두고 증산계획의 말단 실행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증산운동은 靑年隊生産報國運動을 비롯하여 農土, 總進軍, 總突擊運動과 같은 군대용어를 섞어서 보다 강력히 전개 되었다.

이는 현재 북한의 모습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제말 전시체제기의 부락연맹, 애국반 등은 해방이후 북한에서도 그 조직적 형태는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인터뷰한 경험에 따르면, 일제말기 마을에 있던 '애국반' 등은 해방이후 북한체제에서도 그 형태는 그대로 이어졌다고 한다.⁹ 하지만, 그 운동을 바라보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과 그 운동의 내용에서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일제가 도발한 전쟁의 부담을 강점지 조선에 부담시키기 위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동원되었던 것과 해방이 되어 '자신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것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성격 자체가 다른데 설령 그 양태가 비슷하다고 하여 동원이 성격이 같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식민지 시기 '보통강 개수공사'는 1937년부터 9년 동안 연인원 300만명을 동원하고도 완수되지 못했다. 반면 해방 이후 '보통강 개수공사'는 1946년 연인원 40만명이 '동원'되어 2개월도 못되어 완성되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현재의 시점까지도 북한 사람들을 '동원' 하기 위해 '보통강 개수공사'가 호명되는 것은 문제이지만, 분명 당시의 결과는 '내 조국' 건설에 기여이 '동참' 하겠다는 자발성이 결합된 것이었다. 당시 북한 정책 담당자들도 인민의 '동원'에 최대한

⁸ 예대열, 「해방이후 북한의 노동조합 성격논쟁과 노동정책 특질」, 『역사와 현실』 7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8, 214쪽.

⁹ 이○○ 인터뷰, 2004년 10월 23일, 인제군 자택.

문 : "일제말기 마을에 있었던 애국반 등이 해방이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답 : "그대로 갔지. 해방된다고 뭐 달라지나? 그런데 반장은 바뀌었어."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기재를 활용 하였다. '동원'의 형태는 유상동원과 무상동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유상동원은 도급제를 적용하여 경제적 보상을 통해 능률과 생산성을 높였고, 무상동원은 1년에 20일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남용을 방지하였다.¹⁰

3. 공업정책의 연속과 단절

저자가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체제를 연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은 공업정책의 연속적 측면이다.¹¹ 그렇다면 공업정책과 관련해서 식민지와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은 식민지 경제구조의 규정력과 연속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일제말기 전시통제는 현실 생활 속에 사는 조선인들에게 '계획경제'를 깊이 각인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국영이 중심이 된 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주요 국부(國富)를 일본이 독점지배하고 있던 현실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식민지 경제구조가 남겨둔 규정력 이라고 설명하면 모를까 연속성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식민지와 해방 이후 북한의 경제는 연속성 보다는 단절적 측면이 훨씬 강했다. 우선 해방 이후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구조의 단절은 산업구조의 파행성과 편파성으로 잔존하여 경제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북한지역에 중공업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일본경제의 부속물로서 그 관계가 단절되자 유기적 연관은 모두 끊어졌다. 산업부문간 연계의 단절은 공간조직의 파행으로도 이어졌다. 공업시설은 원료·지하자원의 약탈과 일본으로의 반출에 편리한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항만지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업분포의 지역적 편파성은 38선 획정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군수산업에 집중되었던 공업구조는 해방 이후 평화산업으로 전환하는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제가 소유하고 있던 공업구조의 특성상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필품과 공산품에 대한 수요는 충족되지 않았다. 인적인 측면에서도 설령 일제말기 노동자들의 기술력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이었다. 1947년 현재 북한에서 기술자라고 칭할 만큼 기술력을 담보하고 있는 노동자는 1,275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중 각 부분의 기술자 비율은 전기 6%, 흑색금속 3.2%, 건재 1.1%, 경공업 0.9%, 광업 0.7% 밖에 되지 않았다.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던 수풍발전소의 경우에도 조선인 기술자는 고작 5~6명에 불과했다. 기술자들의 숫자가 한 국가의 경제를 재건하기에는 턱

¹⁰ 한모니카, 「1947~49 인제군 개답사업에 나타난 당·정의 역할과 인민노력동원」, 『역사와 현실』 60호, 한국역사연구회, 78~85쪽.

¹¹ 기무라 미쓰히코, 앞의 논문, 2006, 755쪽.

없이 모자랐던 것을 보면, 일제말기 조선노동자들의 기술수준 향상은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원료자원의 약탈과 상품판매시장,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 등 일본의 식민지 경제구조가 가져온 결과물이었다. 군수자원이나 원료·반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공급하는 파행적이었던 공업구조는 해방 이후 그대로 잔존하여, 북한경제에 자체의 자율적인 재생산 순환을 보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해방 이전 조선의 공업이 일제에 구조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 경제구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이 급속한 복구와 경제성장을 하는데 일제시기 건설된 산업인프라와 공업시설이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에서의 경제성장은 일제 말기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전쟁을 거치면서 일제의 물적 유산은 거의 대부분 망실되었다. 유럽에서 독일이 분단된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패전국 일본 대신 남북한이 분단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외적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되겠지만, 분단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전쟁 발발의 거시적 원인 중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북한경제에 있어 식민지와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논할 때는 한국전쟁기에 있었던 전쟁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식민지와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는 단순히 '동원'과 '수탈'의 형태만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다.¹²

4. 결론

그렇다면 위의 논의처럼 전시체제의 경험과 해방이후 북한은 단절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필자는 전시체제의 경험이 민중적 차원이건, 리더십의 차원이건 단절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무라 미쓰히코의 논지와 같이 현상적인 '경제통제'를 가지고 전시체제의 경험이 그대로 북한사회에 전이되었다는 논의에는 반대한다.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식민지경험과의 연속선상에서 북한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짧게는 전시체제의 경험이, 길게는 식민지의 경험이 북한의 인민과 리더십 차원에서는 어떻게 연속되어 나타났을까?

해방 후 한반도는 식민성의 모순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면서도 분단을 지렛대로 변형된 형태로 심화되어 세계적으로 근대와 식민지 근대의 모순이 가장 첨예한 곳이 되었다. 남과 북의 내부 모순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화와 열린 의식을 억압하고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남북 각각의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분단 모순의 완화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¹² 예대열, 「미국 역사학계의 북한사 인식 비판 -찰스 암스트롱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 36호, 고려사학회, 443~445쪽.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 역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해방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반제투쟁의식을 고취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얻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건설에서 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졌는가 하는 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율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쟁 상황과 달리 새로운 차원의 단련과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했다. '인민'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로 인식하는 민주화 영역의 확대와 정치의식의 변화·발전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생략된 채, 반제투쟁의 '정통성'만 강조할 경우 국가권력과 소외된 '인민'의 정치의식은 고립되고 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자와 같은 인식은 '식민지와 해방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 즉 해방 이후의 탈식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식민지와 근대 국민국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근대 국민국가는 각종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최소한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하며 그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반면에, 식민지를 수반한 제국주의 국가는 수탈과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폭력을 수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성장에 힘입어 자금·물자·인력에 대해 최대한의 수탈을 자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시대적 함의와 구체성을 사상한 채 이루어지는 단지 정책의 유사성을 가지고 연속을 얘기하는 것은 더욱 철저하게 부정해야 할 대상에 대해 포용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